

기후X청년X빈곤 심포지움 자료집

기 후 위 기 는 어 땡 게 우 리 를
더 가 난 하 게 만 드 는 가 ?

10/6 & 10/13 목 늦은 6시
공간새길 & 온라인 줌(ZOOM)

기독교대한감리회 청년회전국연합회, 기독교한국루터회 청년연합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데나리온은행,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청년위원회
후원 | NCCK생명문화위원회, PCUSA(미국장로교)

기후위기와 기후정의

한재각
(기후정의활동가)

기후우울? 자연스런 감정이다!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경고도 계속 되고 있다



YN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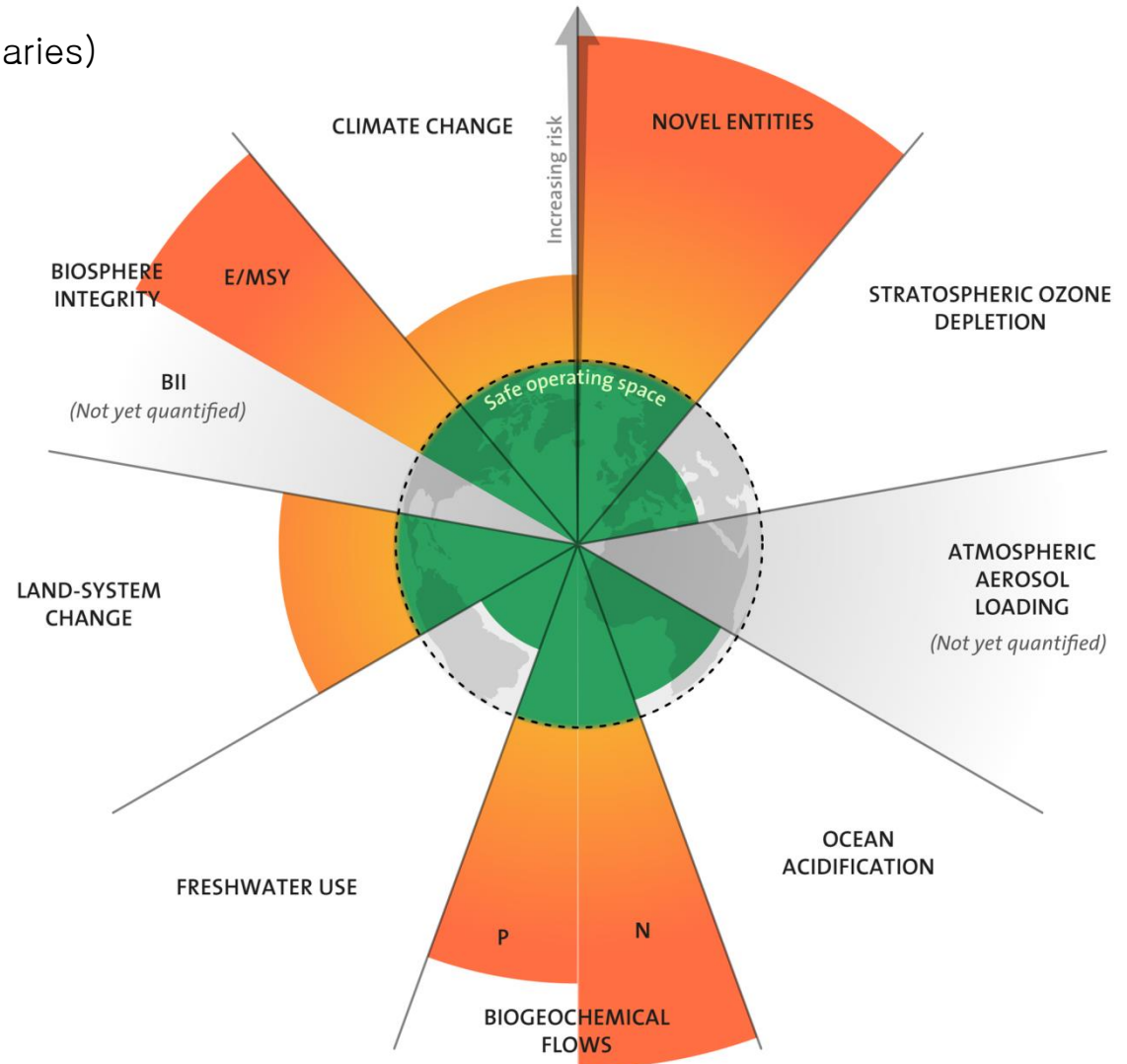
세계 과학자 1만4천명 "기후변화 위급한 상황" 집단 경고(종합) | 연합뉴스



인류 경제 활동의 ‘지구적 한계’가 존재하는가(1)

지구의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 2009년 스톡홀름 복원력 센터의 요한 록스트롬 등의 과학자들은 ‘지구적 위험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이라는 개념을 개발
- 과학자들은 지구의 시스템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아홉 개의 과정(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손실, 해양 산성화, 토지 이용의 변화, 질소와 인의 부하, 담수 이용, 대기의 에어로졸 부하, 화학



인류 경제 활동의 ‘지구적 한계’가 존재하는가(2)

그레타 툰베리, 2019년 7월 23일, 프랑스 국민의회(하원) 연설 중에서



“

저는 최근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 2장, 108쪽을 언급하고 싶습니다(중략)
지금처럼 배출한다면 남아있는 420기가 톤의 탄소예산이 대략 8년 반 안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수치입니다(중략)

”

탄소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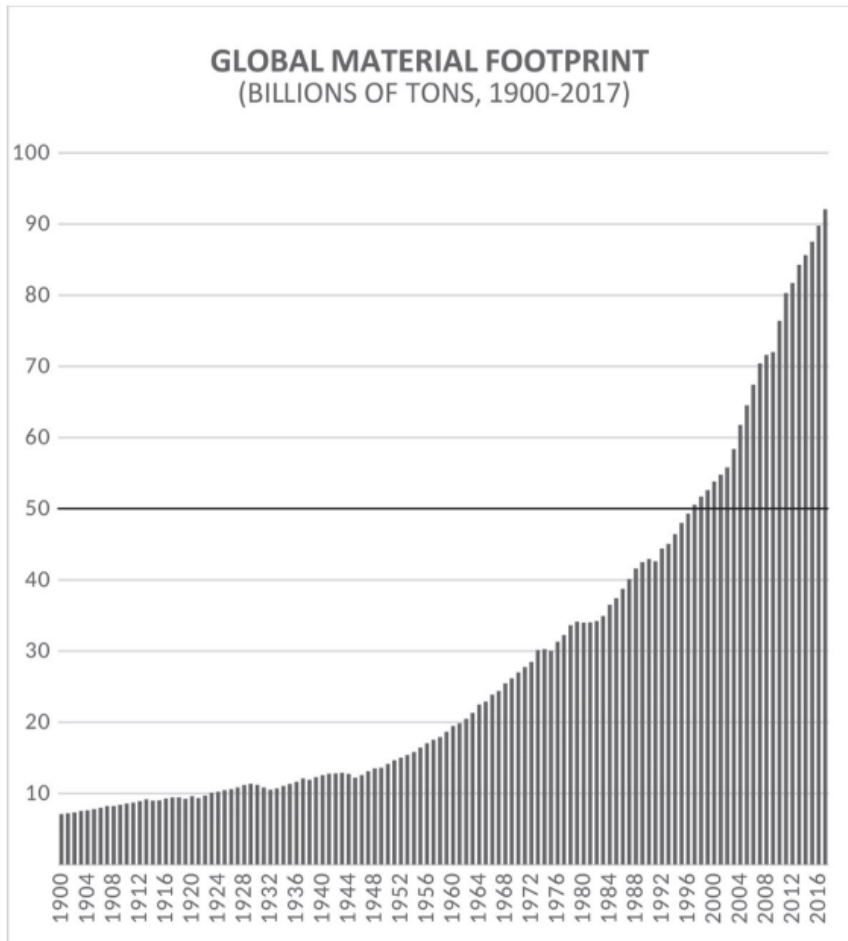
- Cumulative CO₂ emissions are kept within a budget by reducing global annual CO₂ emissions to net zero. This assessment suggests a remaining budget of ~~about 420 GtCO₂ for a two-thirds chance of limiting warming to~~ 1.5°C, and of about 580 GtCO₂ for an even chance (medium confidence).
- The remaining carbon budget is defined here as cumulative CO₂ emissions from the start of 2018 until the time of net zero global emissions for global warming.

자본주의 성장체제

연간 성장률 3%는 24년마다 경제 규모를 2배 늘리고,
48년마다 4배로 늘리며, 100년 안에 16배로 늘리게 될 것



경제성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채굴할 수 있나?



지구적 물질 발자국: 바이오매스, 금속, 광물, 화석연료, 건축자재 등 매년 인간이 추출하고 소비한 모든 재료의 총량을 집계한 량. 1900년 70억톤에서 1950년 140억톤, 1980년 350억톤, 2000년 500억톤, 2017년 920억톤

“과학자들은 지구가 연간 50억톤까지 물질 발자국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추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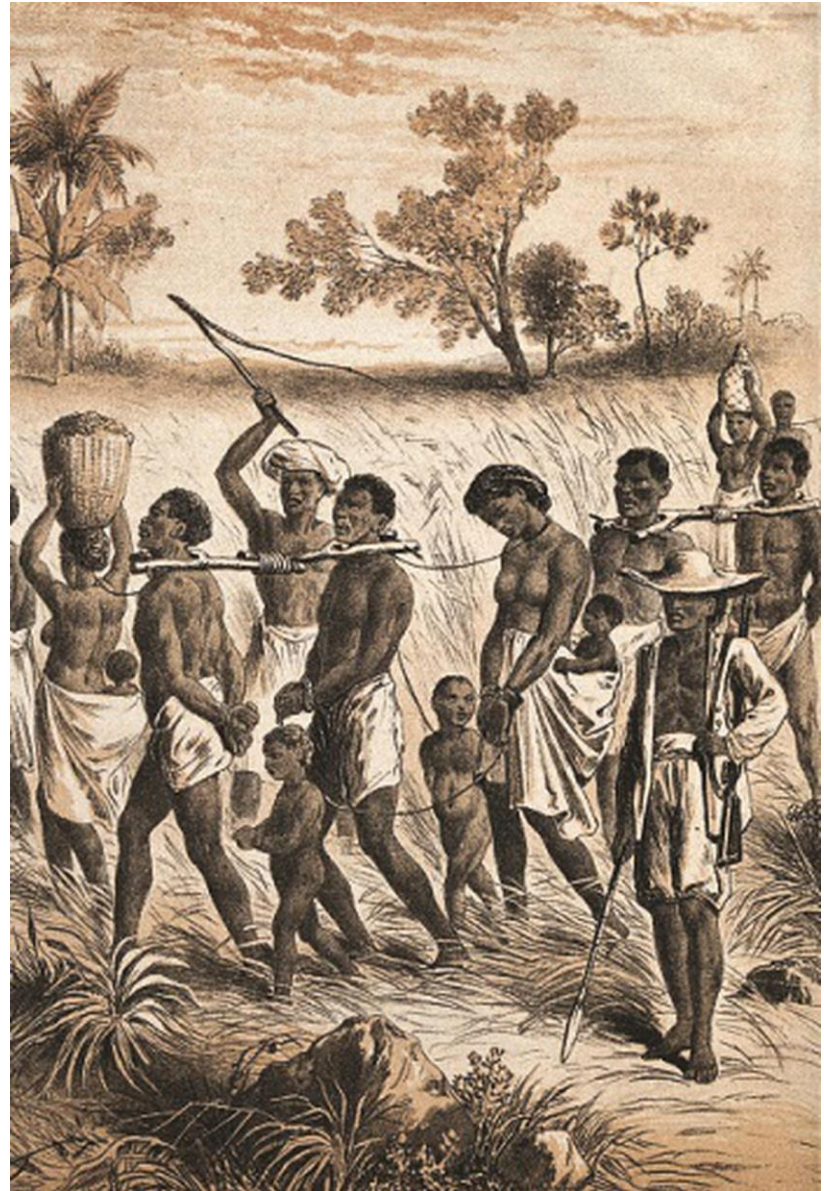
*출처: 제이슨 히켈(2021), <<적을수록 풍요롭다>>, 147쪽과 149쪽

The horizontal black line indicates what scientists consider to be the maximum sustainable threshold (Bringezu 2015). Source: Krausmann et al. (2009), materialflow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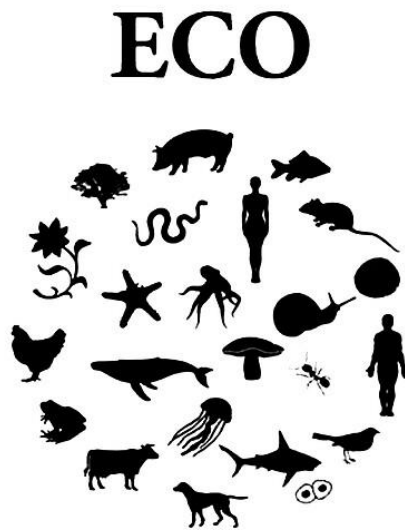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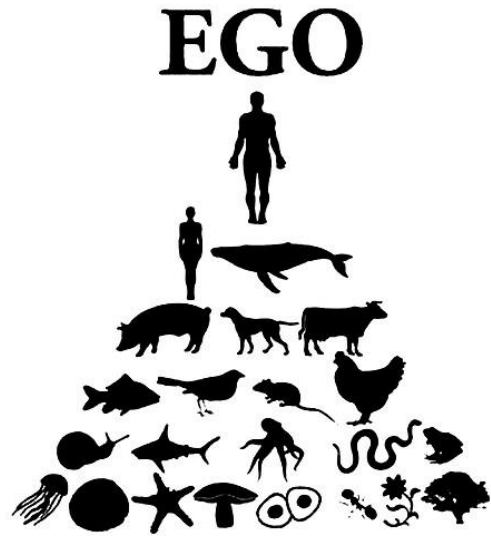
인간과 자연의 분리, 자연에 대한 착취, 그 위에 선 민주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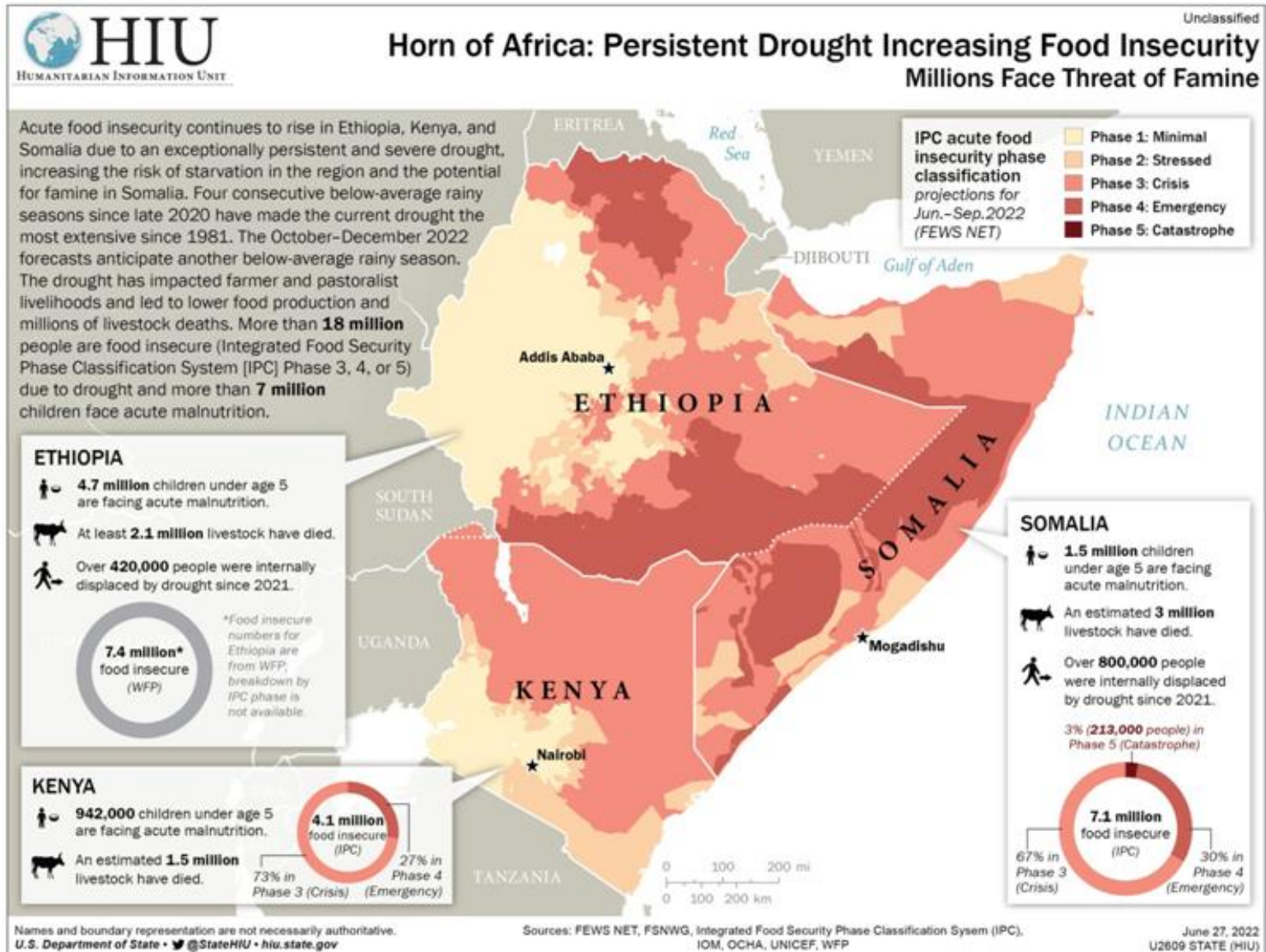
근대 과학의 아버지. 프란시스 베이컨
“과학은 비밀을 캐내기 위해 자연을, 말하
자연, 고문해야 한다”. “자연을 정복하고
복종시키며 자연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질 것이다”



착취하는 일부의 인간과 나머지 존재 사이의 민주주의 투쟁



아프리카 뿔 지역의 가뭄과 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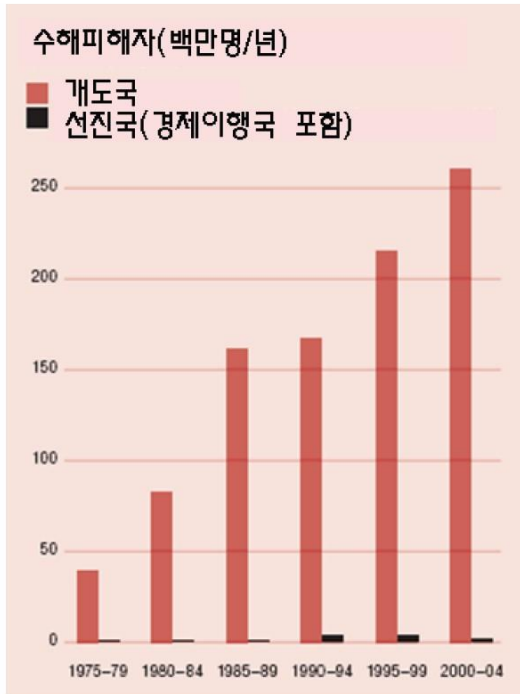
0 100 200 mi
0 100 200 km

배출량 1%도 안되는 파키스탄의 홍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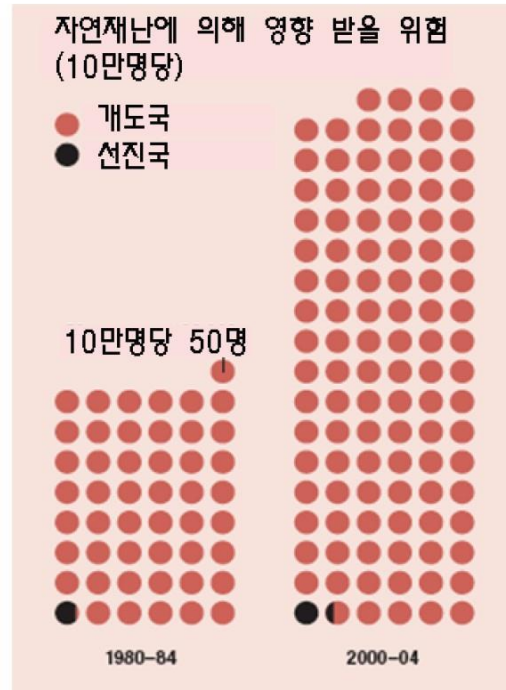
기후재앙은 차별적이다_”본질적으로 불평등의 위기”

<그림 1> 수해 피해자 추세



출처: UNDP, 2007

<그림 2> 자연재난의 차별적 위험



출처: UNDP,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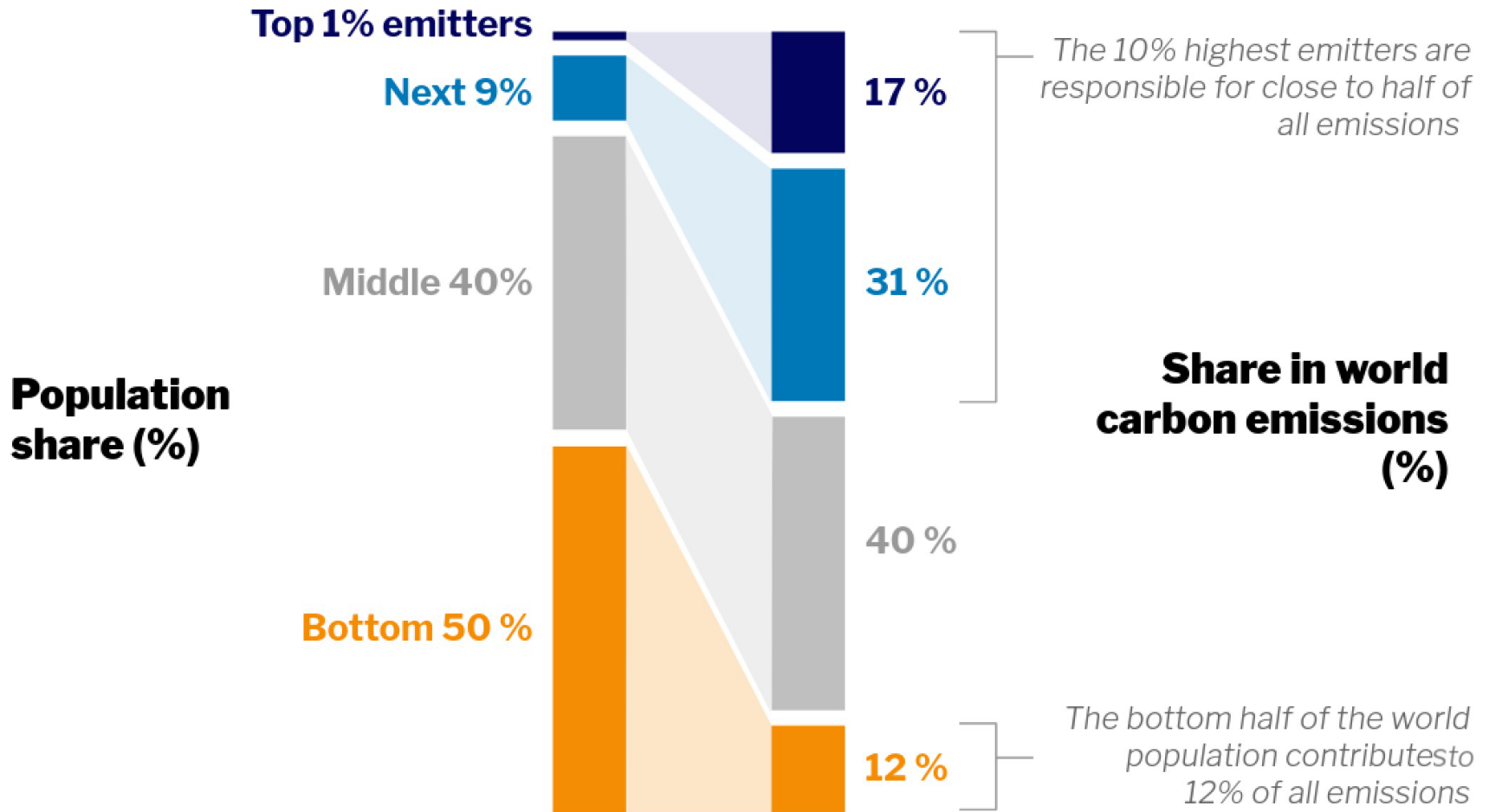


“지구의 생태계 붕괴는 거의 전적으로 고소득 국가의 과도한 성장과 특히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과도한 축적에 따른 것이다. 반면 그로 인한 결과는 불균형하게 남반구와 가난한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제이슨 히켈, 2021: 47)

한국의 기후재난과 불평등



지구적 탄소불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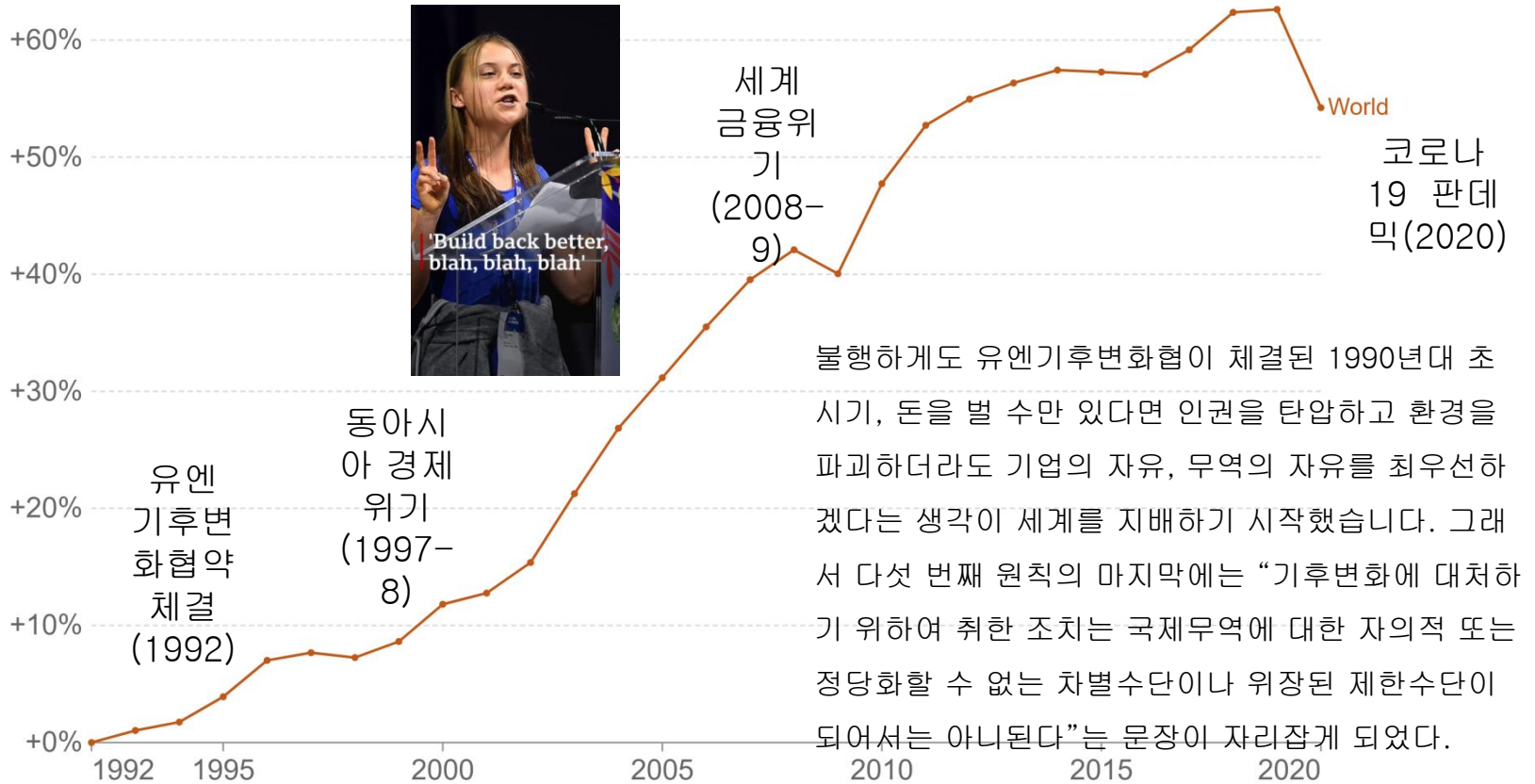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에도,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

Change in annual CO₂ emissions

Carbon dioxide (CO₂) emissions from the burning of fossil fuels for energy and cement production. Land use change is not included.

Our World
in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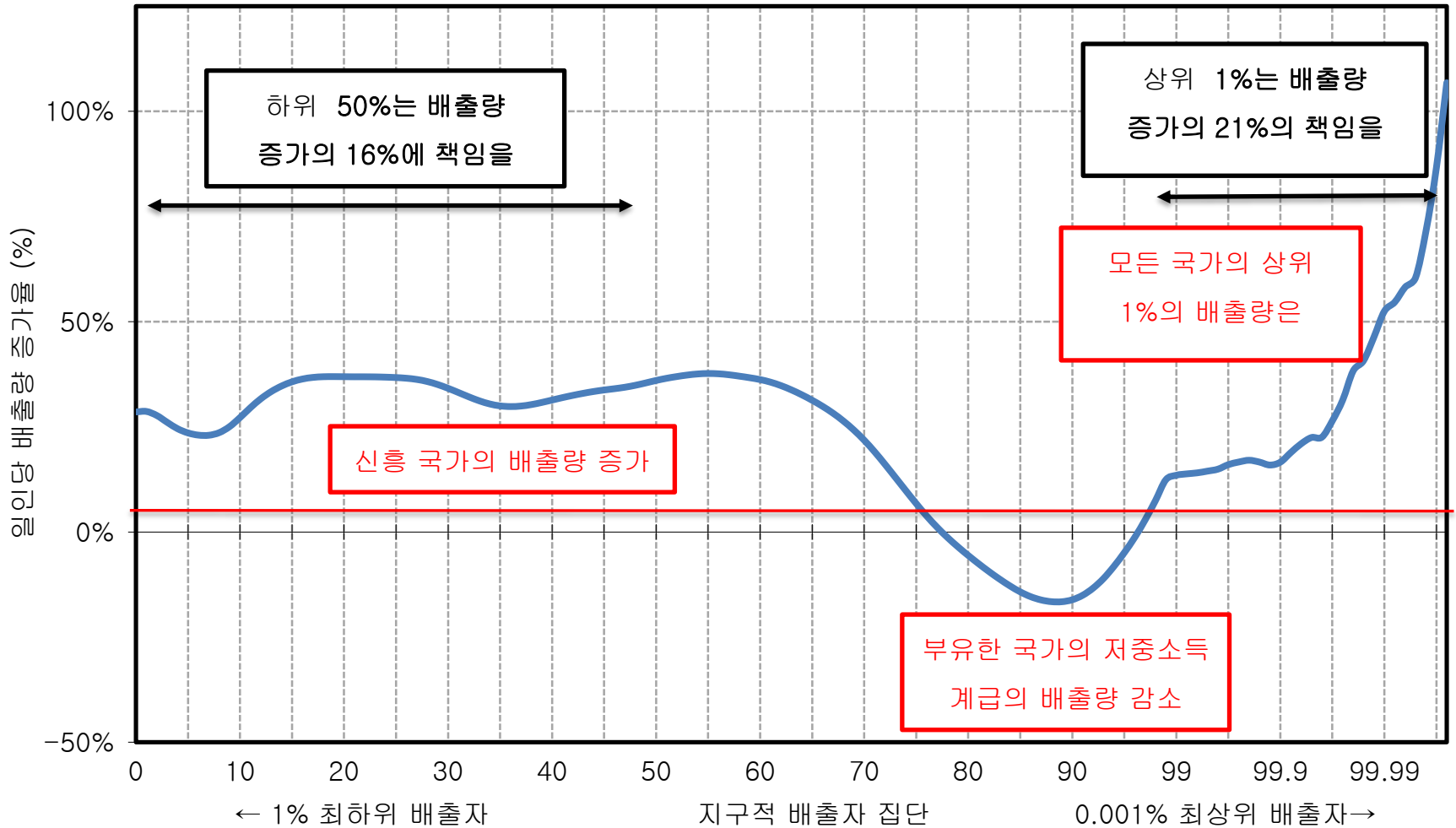


Source: Global Carbon Project

OurWorldInData.org/co2-and-other-greenhouse-gas-emissions/ • CC BY

Note: CO₂ emissions are measured on a production basis, meaning they do not adjust for emissions embedded in traded goods.

누가 배출량 증가를 주도했는가(1990-2019)



해설: 지구적 하위 50%의 배출량은 199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대략 20-40% 증가했다. 주목할 것은 하위 80% 이상과 상위 5% 아래의 집단의 배출량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들 집단은 주로 부유한 국가의 저중소득 집단들이다. 지구적 상위 1% 등의 부유한 계층의 배출량은 상당히 증가했다. 개인별 탄소 발자국은 국내 소비, 공적 및 사적 투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거래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 배출량을 포함한다. 모델링을 통한 추정치는 세금 데이터, 가구별 조사 그리고 투입-산출표에 기반하고 있다.

“극단적인 부는 극단적인 오염을 가지고 온다”



Space tourism: rockets emit 100 times more CO₂ per passenger than flights – imagine a whole indu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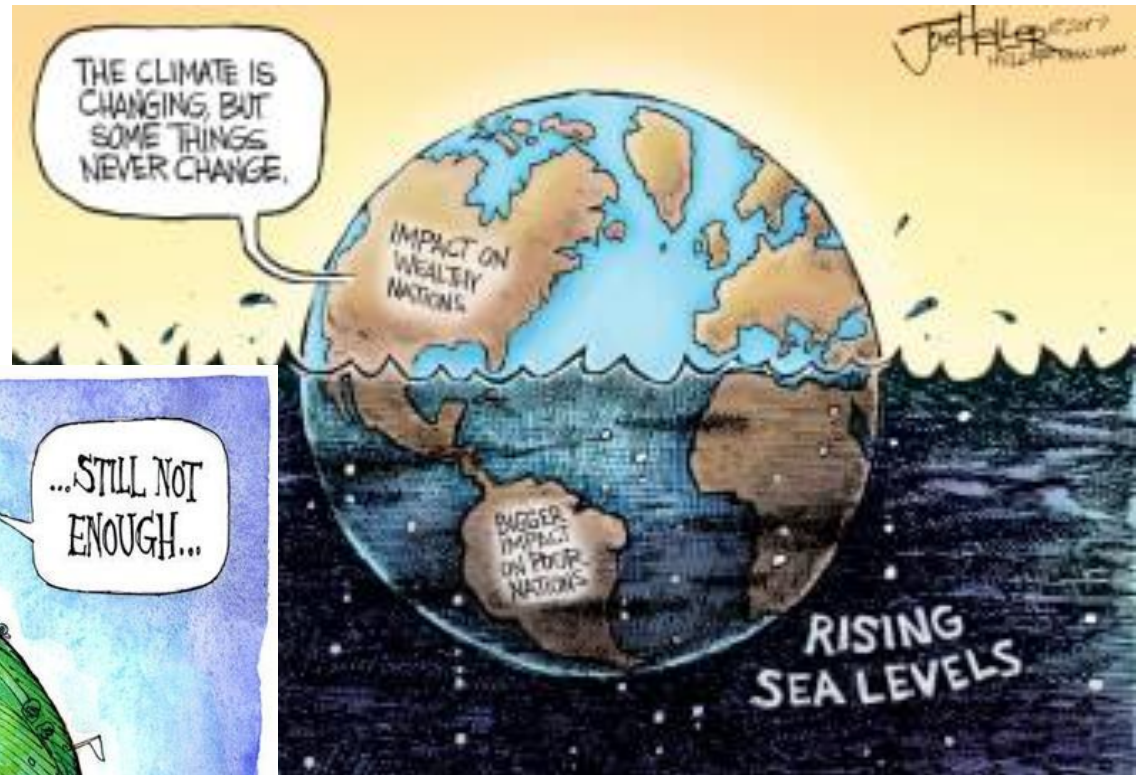
Published: July 19, 2021 2.45pm BST

“아마도 부의 불평등과 관련된 극단적 오염의 가장 뚜렷한 최근의 사례는 우주 여행일 것이다. 우주 여행은 한 회당 수천 달러에서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 단 **11분의 비행은** 간접적인 배출(대개 250-1,000톤)을 고려했을 때, **승객당 75톤 가량의 탄소를 배출한다**(22). 극단적 부유층의 반대편에는 일년에 1톤도 배출하지 않는 대략 10억명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생애 동안, 10억 명의 집단은 일인당 75톤 이상을 배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우주 비행을 위한 몇 분 동안 하위 10억명의 사람들이 일생 동안 배출하게 될 탄소보다 많이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Lucas Chancel, 2020)

기후위기의 해결책?



불평등은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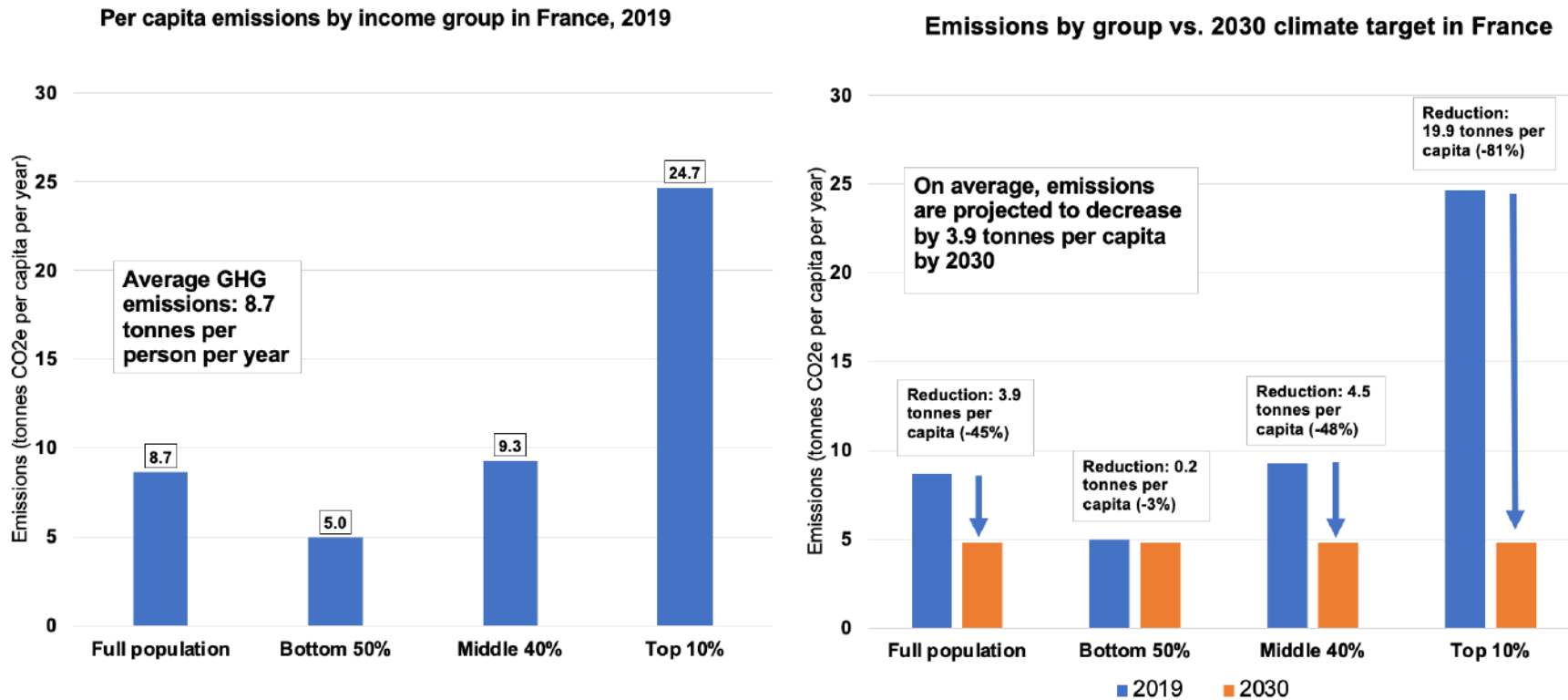
“기후위기 해결책은 평등이다”



- "이는 우리를 단순하지만 급진적인 결론으로 이끈다. 최상위 부유층의 소득을 줄이는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생태적 효용을 가질 것이다"(247쪽).
-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불평등 전문가', 토마 피케티도 동의하며 다름과 같이 말한다. "최상위 부유층의 급격한 구매력 감소는 결국 그 자체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배출 감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인용: 2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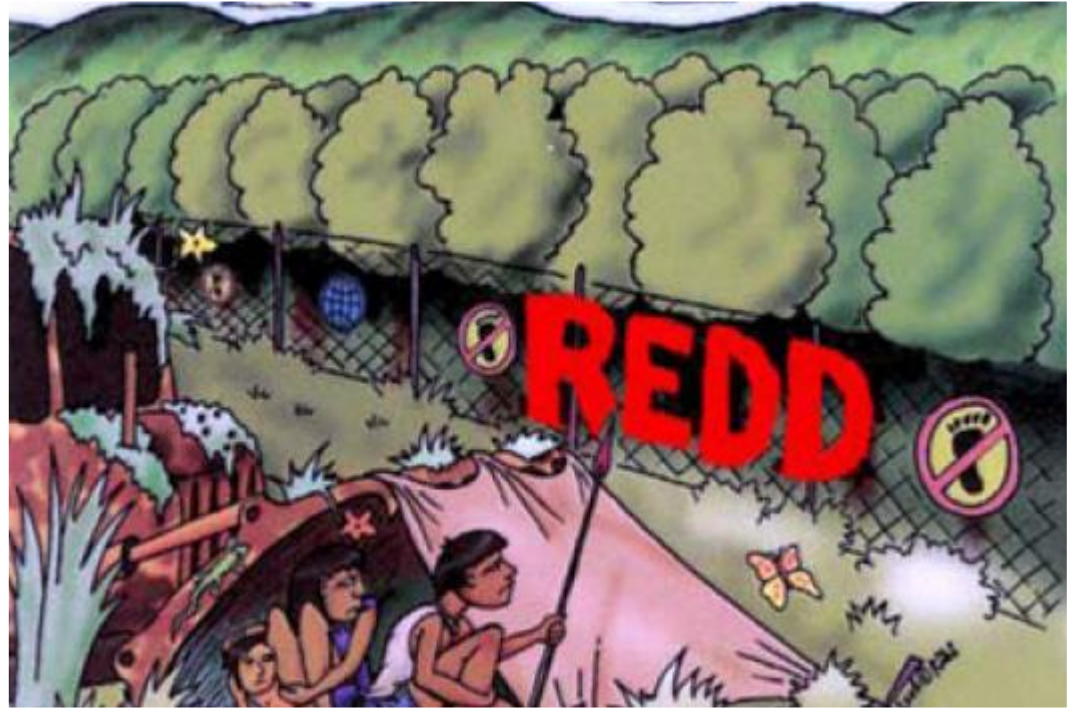
누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가_부유층 먼저

Figure 10B. Emissions inequality and per capita emissions target in France, 2019-2030



Interpretation: Individual carbon footprints include emissions from all greenhouse gases stemming from domestic consumption,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as well as imports and exports of carbon embedded in goods and services traded with the rest of the world. Modeled estimates based on the systematic combination of national accounts, tax and survey data, input-output models and energy datasets. Emissions are split equally within households. The 2030 target corresponds to the overall emissions budget announced by governments for 2030, divided by the total population of the country in 2030. **Source and series:** Chancel (2021)

탄소중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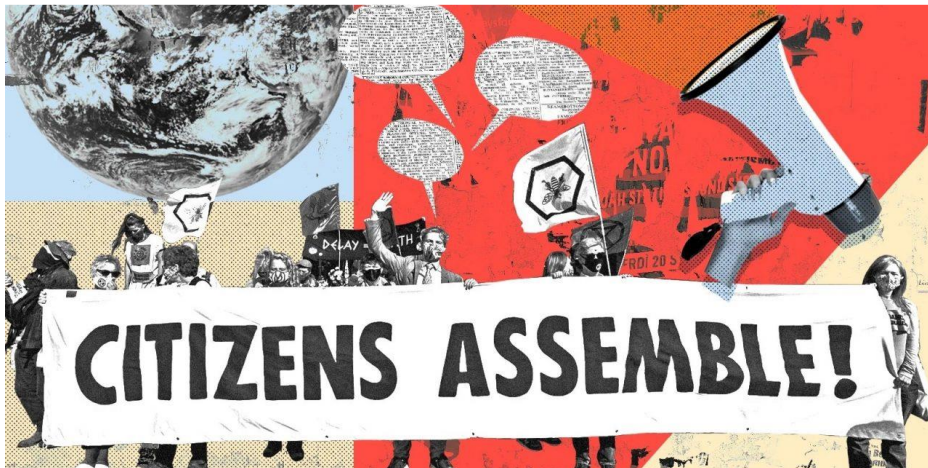
더 나은 지구를 위한
탄소중립 휘발유&경유



탄소식민주의?!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의 실패의 결과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
기후위기는
노동현장의 위기입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9.24행진에 참여합시다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

부정적인 폭우, 폭염에 맞서는
“9월24초” 기후정의 온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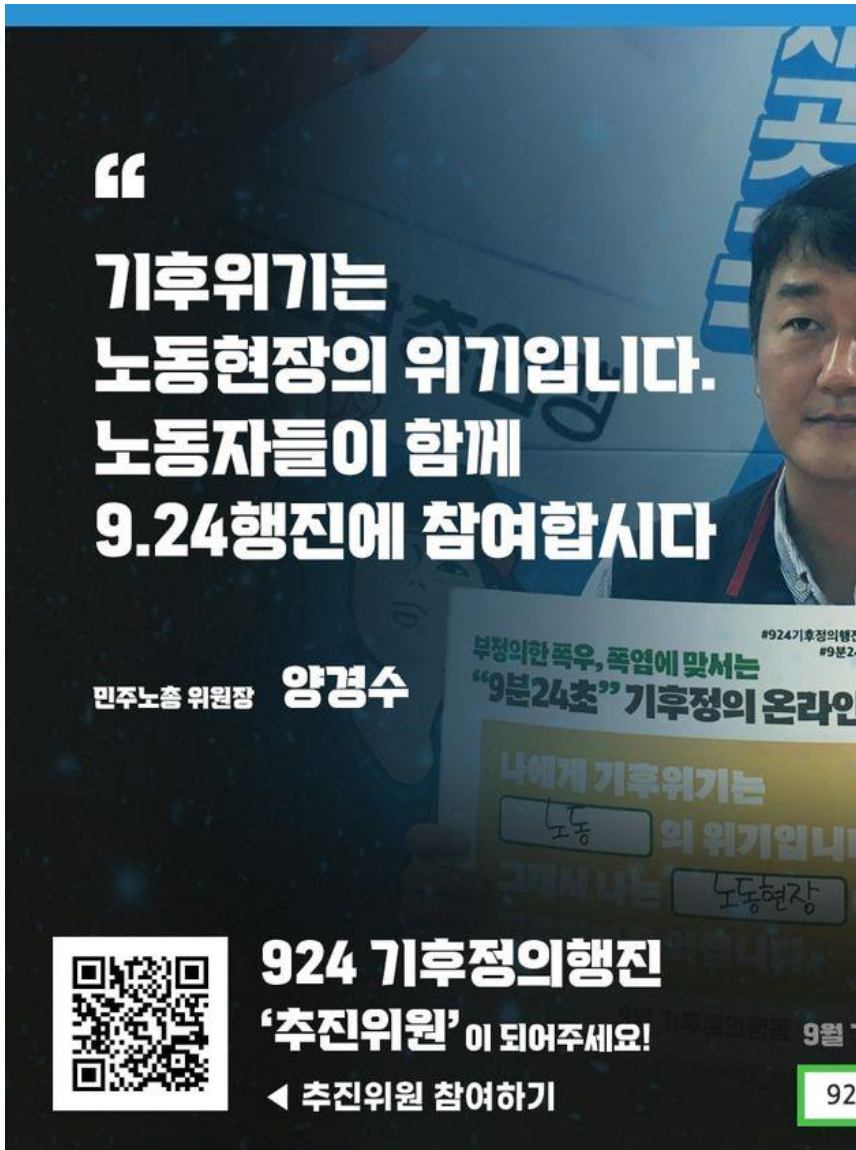
나에게 기후위기는
노동 의 위기입니다

노동현장

924 기후정의행진
‘추진위원’이 되어주세요!

9월 7
92.

◀ 추진위원 참여하기



WHAT IS MAPA?

Most Affected People and Areas



It is a term we are using instead of the "Global South"



MAPA are the areas that were colonized and historically marginalized in the globe

We are the least responsible for the climate emergency, but we are the ones who suffer the most from its consequences

We live in a crisis that began centuries ago when the current profit-oriented system was born

Our regions are the most exploited but least benefited

Our regions are the most dangerous to be defenders of the enviro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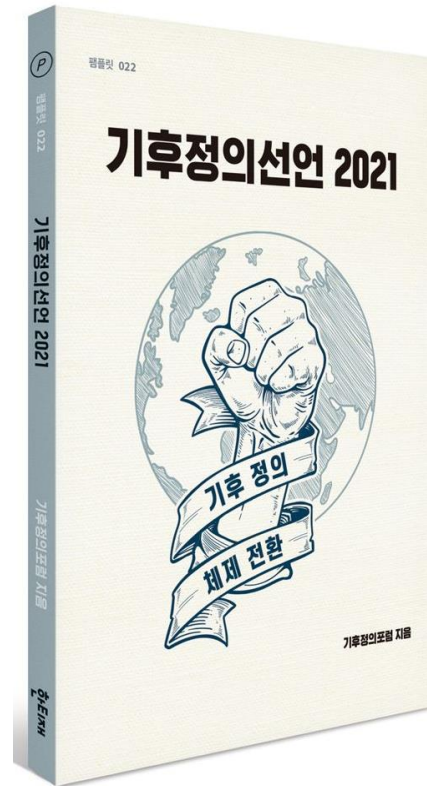
And our regions are the least prepared to face a crisis of such dimens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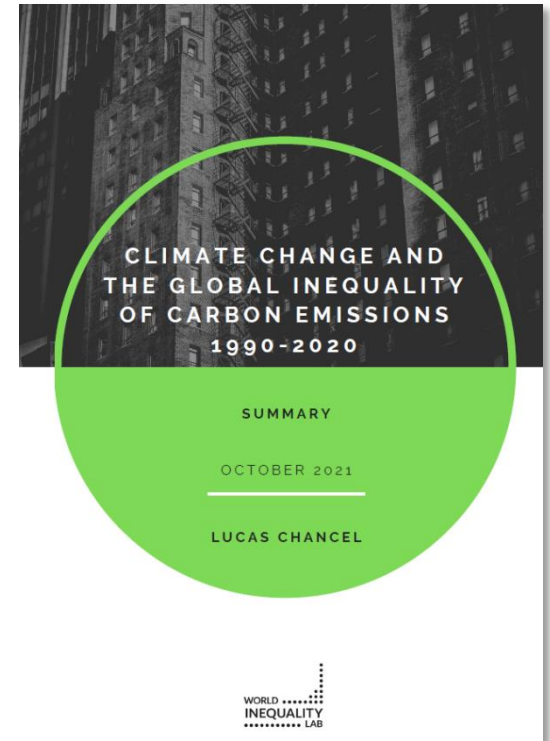
Unheard but not Voiceless.
#FightClimateInjustice



더 읽을꺼리



기후정의선언 2021(편집본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oKjMVRReE3TOjhsfIZReviydbboLBXeDw/view?usp=sharing>



기후변화와 탄소 배출의 지구적 불평등, 1990-2020(국문번역본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file/d/15lkW4f4tcN32tOKyPTlhAFIswaaPcO9-/view?usp=sharing>

감사합니다

기후위기와 기후정의1)

한재각(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

1. 우리는 유한한 세계에서 살고 있고, 또다른 지구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존 기반인 안정적인 기후가 무너져 내리면서, 인류 문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구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복원력센터의 요한 록스트림과 같은 과학자들은 ‘지구적 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 시스템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통제되어야 할, 잠재적으로 불안정한 아홉 개의 요소들, 예를 들어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화학물질 오염 등을 제시하고, 주의 깊게 살피고 있습니다. 즉, 인류의 경제 활동을 위해서, 계속 지구 자원을 채굴하여 이용하며, 그로부터 나온 폐기물을 마구 버린 결과로, 지구 시스템의 안정성이 무너지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의 평가에 의하면, 기후변화 이외에도 생물종 다양성의 손실, 질소와 인의 오염, 새로운 화학물질의 오염 등이 지구적 위험 한계선을 크게 넘어서 있습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묶어두자고 했을 때,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 총량 즉, 탄소예산은 지금처럼 배출했을 때 5년이면 모두 사라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들이 인류 경제 활동의 한계에 다시 주목하게 만듭니다.

2. 무한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본주의 성장체제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무한한 이윤 추구 욕망에 의해 지배 받는 자본주의 체제가 추구하는 맹목적 목표이며, 자본주의가 심화시키고 있는 불평등의 파국을 계속 유예하기 위한 핵심적인 동학입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대변하는 주류 엘리트들은 경제성장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는 연간 성장률 3%는 24년마다 경제 규모를 2배 늘리고, 48년마다 4배로 늘리며, 100년 안에 16배로 늘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팽창하는 경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구 곳곳에서 막대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채굴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구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적 물질발자국, 즉, 바이오매스, 금속, 광물, 화석연료, 건축자재 등 매년 인간이 추출하고 소비한 모든 재료의 총량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1900년 70억톤에서, 2000년 500억톤으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거의 두배인 920억톤까지 증가하고 있지만, 지구가 처리할 수 있는 물질발자국은 연간 500억톤에 불과합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1) 이 글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2022년 9월 15일에 개최한 <1+7분 민주주의 강연회>에서 발표한 ‘환경위기는 인권위기다’라는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과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르고스 칼리스와 같은 탈성장 연구자들은 “영속적 성장과 복불 성장은 유한한 지구 안에서 비상식적인 개념”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 민주주의는 인간 사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기후위기와 생태위기, 지속불가능성에 직면하면서 우리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근대에 자본주의에 들어서면서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를 분리하고, 인간이 나머지 존재를 무한히 착취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인간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대우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제국주의자들이 점령한 땅에 살던 이들은, 인간이 아니라 자연에 속한 존재로 간주되었고, 목숨을 빼앗아도 노예를 삼아도 상관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 안에서도 노동자를 비롯한 하층 계급들이 인권이라는 것을 보장받지 못한 시간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무한히 이윤을 추구하고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인간, 그리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착취하는 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대멸종으로 미끌어져 가고 있는 거대한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입니다. 이제 민주주의는 인간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착취하는 일부의 인간과 나머지 모든 존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의와 불평등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4.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불타오르고, 가뭄이 들고, 홍수로 잠기고 있습니다. 세 번의 우기가 비 없이 지나간, 아프리카 뿔 지역은 오랜 가뭄으로 2천 2백만명이 기아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이미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키우던 수백만 가축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에 앞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섬 남부의 사람들도 오랜 가뭄으로 굶주림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재난으로 벌어진 첫번째 기아 사태의 희생자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지구의 다른 쪽, 파키스탄의 사람들도 최근 엄청난 홍수를 겪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토의 1/3이 물에 잠겼으며, 수많은 도로, 다리, 건물들이 거센 물결에 휩쓸려 갔고, 파키스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전체 인구 7명 중 1명인, 3,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홍수 피해를 겪고 있으며, 벌써 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6월부터 시작되어 엄청나게 쏟아진 몬순의 폭우와 함께, 지구온난화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빔어진, 기후재난의 결과였습니다. 기후재난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와 파키스탄 사람들은 거의 배출하고 있지 않지만, 기후재난으로 죽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해 쏟아지는 관심도 다릅니다. 부유한 유럽과 미국에서 잔디밭 물주기가 금지되었다는 소식마저 주목할 만한 뉴스이지만, 에티오피아와 파키스탄의 기아와 홍수로 인

한 죽음은 잠시 잠깐의 뉴스로 사라져 갑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기후위기가 왜 인권의 문제 인지를 말해줍니다.

5. 불평등이 기후재난입니다.

한번도 가볼 일 없는 먼 나라 이야기 쯤으로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한국에서도 기후재난은 이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20년 장장 54일 동안 이어진 장마비가 만들어낸 홍수는, 전남 구례 시내를 집 높이 만큼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초 삼척-울진에서는 마작 마른 봄철 가뭄으로, 커다란 산불이 꺼지지 않고 타올라, 핵발전소까지 위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8월 초, 폭우로 인해 발행한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 거주민의 죽음을 안타깝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여 반지하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이 삶과 죽음을 갈랐고, 많은 이들이 “불평등이 재난”이라고 외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슬프고 더 화가 나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석유기업 SK의 2조 3천억원이 넘는 2분기 영업이익 뉴스와 그들의 죽음이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석유회사들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고유가 사태를 기회주의적으로 이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결과였습니다. 누군가는 석유를 팔아서 거대한 이익을 얻는 반면, 누군가는 그 결과로 배출된 온실가스, 그리고 기후재난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6. “극단적인 부는 극단적인 오염을 낳는다”

전지구적으로 한해 동안 배출된 온실가스의 거의 절반은 상위 10%의 부자들에 의한 것입니다. 전세계 인구의 절반, 가난한 50%의 사람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의 비중은 겨우 10%를 넘어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을 잃고, 가축을 잃고, 먹거리를 잃고, 살던 땅을 떠나 난민으로 떠돌고, 중국에는 죽음에까지 이르는 가혹한 삶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10%의 부자가 아니라, 50%의 가난한 이들입니다.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 영향은 치명적일 것이며,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명확히 밝힌 협약에, 전세계 국가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지구적으로 온실가스는 줄지 않고 계속 증가만 했고, 그레타 툰베리와 같은 청소년들은 지난 30년간 대체 무엇을 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 온실가스 증가는 누구에 의해서 주도된 것일까요? 전지구 인구의 절반, 가난한 이들이 기여하는 바는 16% 밖에 되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 1%가 기여하는 바는 21%나 됩니다. 대다수 가난한 이들이 겨우 전등 하나를 켜고, 학교를 다니고, 보건소에서 처음 의사를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겨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이, 자가용 비행기, 호화로운 요트, 거대한 저택, 무겁고 빠른 자동차, 최신 패션과 이국적 음식을 즐긴 극소수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구를 휘저어 놓았습니다. 기후위기를 이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빼고 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는 본질적으로 불평등과 부정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7.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평등입니다.

사람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방법으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떠올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제, ESG 경영과 같은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기후위기는 그러한 기술적, 제도적인 해결책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심대한 문제입니다. 기후위기가 본질적으로 불평등과 부정의에 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기후위기는 불평등과 부정의 문제를 다뤄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후위기의 결과가 부정의하고 불평등하다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부정의와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발생시키고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불평등과 부정의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결과물이지만, 불평등과 부정의 없이는 자본주의 성장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최상위 부유층의 과시적 소비를 뒤따라가도록 내모는 상업주의 압력이 거세고, 사람들은 장기간 노동을 감내하고 자원 낭비에 눈감습니다. 덴마크처럼, 더 평등한 사회라면, 같은 경제 수준일지라도 일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다는 경험적인 증거도 있습니다. 제이슨 히켈과 같은 연구자는 “단순하지만 급진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최상위 부유층의 거대한 소득을 줄여야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공명하면서, 세계불평등연구소는 부유세 혹은 누진적 탄소세의 도입과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평등해야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8. 탄소중립?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탄소제국주의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며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가, 현재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감히 줄이겠다는 뜻이라면,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탄소중립’은 본질적으로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개념입니다. 배출하는 양 만큼 어디선가 흡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은, 기업과 부유한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책임이 없는 나라와 사람들에게 떠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배출과 흡수 사이에서, ‘배출권 시장’을 만들어 또 하나의 투기 상품으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한 석유기업은 ‘탄소중립 휘발유’라는 현기증 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같은 휘발유이지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든다는 비용을 추가해서, 조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뿐입니다. 거대한 이익을 내는 석유산업을 지속하면서도 지구를 구하고 있다는 그린워싱을 가능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닌 지구의 다른 곳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 숲을 흡수원이라는 상품으로 만들고, 그곳 주민들의 삶

의 터전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런 사실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그 피해를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이들에게로, 그리고 미래로 떠넘기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탄소중립 역시, 그런 희생의 전가를 바로잡기보다는 반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지구적 남반구에서 투쟁하는 원주민들은 탄소중립을 탄소식민주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이 아니라, 화석연료 채굴과 이용을 중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배출제로’가 필요하며, 그것은 화석연료에 기반해서 발전한 자본주의 성장체제를 멈춰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9.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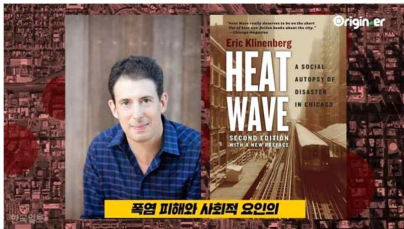
기후위기는 민주주의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다. 유엔기후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만 했다는 사실은, 각국과 지구 차원의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온실가스 오염을 지속하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얻어낸 기업과 자본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은 대다수 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실이, 민주주의의 실패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유발했으며 그로부터 부와 권력을 유지했던 기업 등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국제적 그리고 국가적 기후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거나 새로운 돈벌이 기회로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가장 먼저 대면하고, 가장 큰 희생을 치뤄야 하는, 최일선 당사자들이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노동자, 여성, 농민, 청소년, 도시빈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의 여러 사회적 소수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에, 이들이 기후정치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민주주의를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21006] 기후위기와 빈곤 심포지움 토론문
기후위기와 주거불평등

-최예륜(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재난불평등공동행동)

1. “과거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폭염사회



“사회적 부검”

: 검사관들이 의학적 부검을 실시하는 동안, 그는 희생자들이 생전에 살
있던 집으로. 희생자들의 거주지는 하나같이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아
파트나 싼 모텔들.

- 구급차는 모자랐고, 병원은 자리가 없어 환자를 거부했으며, 시민들은 갑자기 죽은 이웃들을 목격. 이 일이 있기 전 무더위는 사회적 문제
로 취급된 적이 없는데, 폭염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내는 것도 아니고 홍수나 폭설처럼 스펙터클한 장면을 연출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희
생자는 대부분 눈에 잘 띄지 않는 노인, 빈곤층, 1인 가구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
- “과거에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시카고 보건부 고위 관료)
- =>관료주의적으로 만들어진 폭염에 의한 사망과 관련된 공식적 지식, 대참사에 대한 대중의 표현을 관리하려는 조직적인 노력, 관례적
인 보건 업무



4

- ‘한 번도 일어난 적 없는’, ‘사상 초유의’ 기후재난은 불평등을 타고 흘러 약한 곳을 덮
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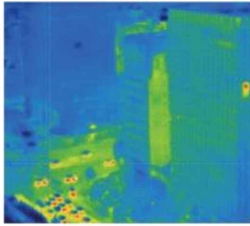
2. 도시의 열기와 흘러내린 물이 향하는 곳은?

기후위기와 주거빈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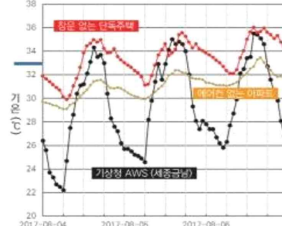
토지피복, 거주환경에 따른 노출 기온의 차이

▶ 도심 내 지표재질과 창문 없는 단독주택의 일중 기온 변화

〈2016.6.7 광화문 일중 열환경 변화〉



〈거주환경에 따른 일중 기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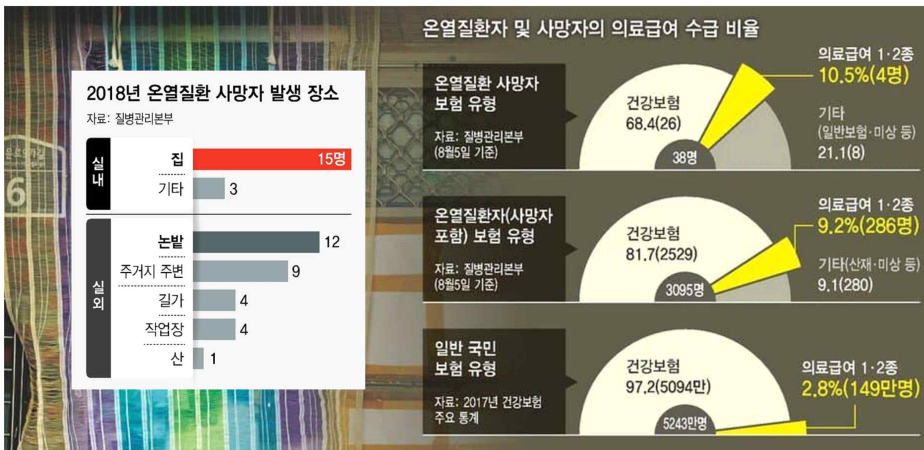
출처: 채여라 외(2017, 2018)

11

출처: 한국외대 대기환경연구소(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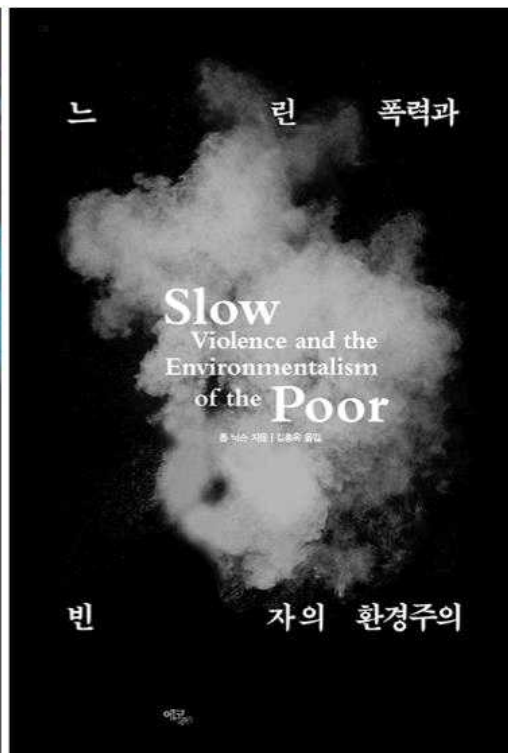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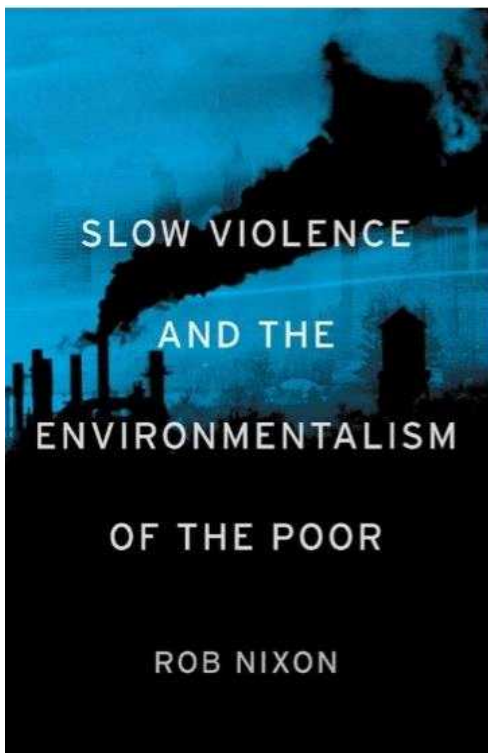
출처: 채여라, "사회경제환경 여건에 따른 폭염영향", 서울시 인권위원회 2019년 포럼, 2019.7.23.

기후위기와 주거빈곤



- 201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기준으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156만 가구, 주택 이외의거처 39만 가구임 주택이외의거처는 2005년 6만, 2010년 13만, 2015년 39만 가구로 급격하게 증가(고시원 가구 증가 등)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외의거처, 지하·옥상 거주 가구는 228만 가구(주거빈곤 가구)

3. 보이지 않는, 재난 속 가난한 사람들



- 느린 폭력과 “비가시성” ; 세계의 “생태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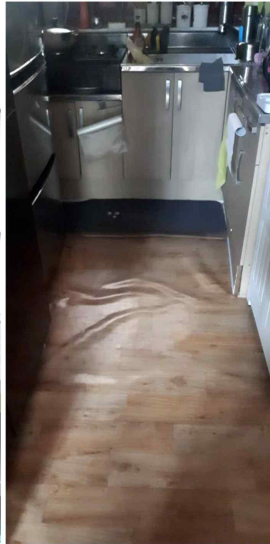
4. 폭우참사 희생자는 말한다

생명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지옥고

- 지옥고는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침수·화재·감전 등 재난 발생 위험이 큼



2020년 2월 시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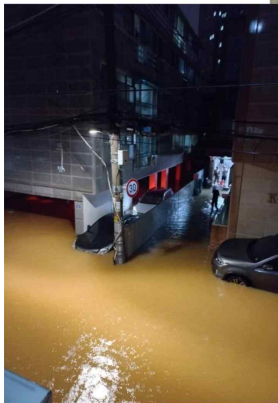
2022년 8월 서울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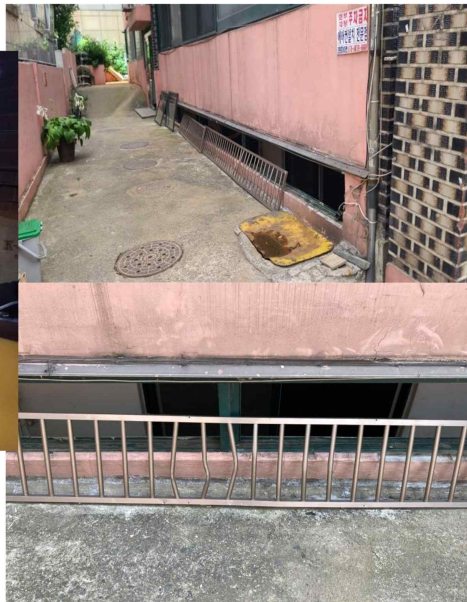
[출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재난시 보금자리가 아닌 흉기가 된 집

- 2022년 8월 관악구 수해 참사 지하는 침수가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집



2022년 8월 관악구 수해 참사 지하 인근 (사진: 이탄희 의원실 제공)



어른키 보다 깊은 지하 공간

구부러져 있는 창틀

[출처]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5. 불평등이 재난이다



25

- 8월 16일, 177개의 노동사회시민단체가 "재난불평등추모행동"을 구성, 희생자를 추모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6.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재난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



-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7천억원 가까이(약 28%)삭감하는 예산안을 발표함.

7.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재난을 부추기는 정책으로 일관



한강을 업무·상업·관광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 주거불평등 해소 방안 없이 '신속통합개발', 대규모 도심 개발 등 개발사업을 통해 기후 재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서울시.
- '2040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을 더욱 심각한 기후재난 취약도시-불평등 도시로 만들 것.

8. 불평등이 재난이다 - 지난 8월 폭우 참사의 원인과 대응방향

- 지난 여름 서울·수도권에 관측 사상 최고치라는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음. 이는 전 지구적으로 규모와 빈도가 늘어가는 기후재난의 드러난 한 사태임. 재난의 위험은 아래로 흐르며 약한 곳을 덮치고 있는 것. 홍00님 가족처럼 지하·반지하에 사는 가수 수는 약 33만 가구에 달함(2020 인구주택총조사). 이중 서울 20만1000여 가구, 경기 8만 9000여가구, 인천 2만 4000여 가구 등 수도권에 대부분이 몰려 있음.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이 지하·반지하 주거형태를 양산해왔는데, 이들 주거형태가 지속되는 것은 도시의 기존 생활권에 머물기 위한 걱정하고 저렴한 다른 주택이 없기 때문. 서울시가 반지하주택을 없애 나가겠다고 10일 발표한 대책은 말만 요란할 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님. 현 상태로는 지하·반지하를 없앤다 해도 이들 주택의 거주자들이 갈 곳이 없음. 리모델링·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비주거용 용도로 전환토록 유도한다는 대책과 모아주택·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대책은 지하주택의 수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도심의 저렴한 주택이 줄어들어 가난한 이들이 또 다른 형태의 열악한 주거로 내몰릴 위험에 처하게 됨.

- 지하·반지하 주거를 없애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 특히 지역에 기반한 복지, 일자리, 관계망 형성을 이루고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기존 생활권 내에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인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상향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음. 결국 도심의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획 없는 서울시의 반지하 대책은, 이를 개발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음.

- 서울은 광범위하고 급격한 개발로 인해 위험에 더욱 취약한 도시가 되어왔음.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덮여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면적률이 높고 녹지가 적으며, 서울 곳곳의 하천들을 복개해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등 집중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운 반생태적 도시가 되어버림. 상황이 이런데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는 더 개발을 부추기는 도시계획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음.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서울을 기후재난에 더 취약한 도시, 기후악당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서울시는 지난 3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 계획 수립단계임. 이른바 '유연한 도시계획'을 표방하며 개발에 관한 규제 완화와 각종 개발 계획들이 가득한 계

획에는 인구감소와 기후위기 등의 여건을 고려했다고 하면서도 탄소배출 저감, 재난 대비,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을 위한 어떤 대책도 포함하지 않았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노후건물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대책 대신 주거밀집지역에 업무·상업 기능을 더하기 위해 용도제한을 푸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음. 이번 폭우에 복개천 주변 지역의 피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성찰 없이 수변지역 개발의 의지만 난무.

- 가난하거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재난 위험에 내몰려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함. 반지하 가족들은 퇴출 대상일 뿐인 위험 거처의 거주자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노동하고 복지·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웃들과 관계를 맺으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우리 이웃임. 정부와 서울시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반지하 가족들을 더욱 열악한 거처로 내몰지 말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함.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기후위기와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야 함은 말할 것도 없음.



8. 불평등이 재난이다 - 주거권보장 지금 당장!



- 세계 주거의 날 맞이, 10.01 주거권대행진 개최, "불평등이 재난이다! 주거권보장, 지금 당장!"
- 주요 요구 : 내나라 공공임대! 팔지마 공공의땅! 지켜라 세입자권리! 늘려라 주거복지!

9. 불평등이 재난이다 이제는 행동하자

불평등이 재난이다

기후위기로 야기된 폭우와 가뭄 한파와 같은 천재지변은
모두의 일상을 뒤흔들지만
가난한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몸이 아프거나 일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쓰러뜨린다.
불평등을 타고 흐른 재난은
더욱더 극심한 불평등으로 우리를 내몰 것이다

우리는 정치의 장식품이 아니다

폭우를 빠져나가 고층 아파트로 퇴근한 대통령
더 많은 개발로 반지하를 없애버리겠다는 서울시장
사진 잘 나오게 비나 더 내리라는 후안무치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난과 우리의 삶은 너희의 장난감이 아니다

이제는 행동하자

더 많은 생산과 소비로 굴러온 자본주의는
기후생태계를 파괴하고
고급 아파트가 생긴 자리마다
가난한 사람들이 쫓겨났다
승자만을 위한 경쟁을 멈추고
모두의 존엄을 위한 연대를 시작하자

우리는 약속한다

한 사람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 이웃을 잃은 우리는
오늘의 희생을 잊지 않고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주거권은 생명이다 주거권을 보장하라!
장애인의 생존과 존엄한 삶 국가가 보장하라!
폭우참사 사망자와 피해자 앞에 정부는 사죄하라!

2022년 8월 19일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 발달장애인 빈곤층
노동자 추모문화제 참가자 일동



청년은 '어떻게' 기후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나?

토론: 정유현(녹색당 전국사무처장)

0. 들어가며

오늘의 자리는 토론자가 갖고 있는 청년 정체성(이미 조금 넘었지만)과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조금 멀어졌지만), 마지막으로 정당인으로서의 정체성(너무 집중되었지만) 때문인지, 기후위기 시대에 청년빈곤의 현실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나누기를 요청받았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기후위기는 어떻게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가'라는 심포지엄 제목에서 '어떻게'는 발제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이라는 지점에 멈춰 우리, 곧 청년 정체성을 가진 당사자들이 '어떻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중점적으로 나눠보고자 한다.

1. 기후정치의 중심에 선 당사자로서 청년?!

발제문 마지막 문장에서 알 수 있듯,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자 기후정치를 말하는 자리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발제자의 결론으로 읽힌다.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 나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청년의 위치는 어디이며, '기후정치'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고민을 열어보자.

알다시피 대부분의 청년들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 청년노동자이거나, 청년여성 또 청년농민이고, 청년장애인이기도 하다. 때로는 청년여성노동자인 동시에 도시빈민성소수자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최일선 당사자들은, 복합적 정체성을 가진 청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같은 청년이라도 서있는 사회적 위치는 다르다. 이성애자, 남성, 비장애인 중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의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들도 많다. 발제문에서 '불평등한 기후위기의 해결은 평등과 정의'에 있다지만, 모두 같은 평등과 정의를 말하는 지에 대한 섬세한 논의도 필요하다. '기후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입장이 있고 심지어 '기후'와 '정의'를 이해하는 정도도 다르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여러 자리에서 치열하게 토론하며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사자성을 강조한 '기후정치의 중심'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가령 '주거문제를 겪는 세입자들의 정치'인지, '이동권과 관련된 공공교통 확대를 위한 정치'인지, '발전소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정치'인지, '청년'이 당사자가 될 때엔 명확한 현장이 없다. 아니면 모든 곳이 다 현장일 수 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청년'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에 서야 하는지 분명치 않다. 이런 면에서 924 기후정의행진은 당사자 뿐 아니라 많은 일반시민들, 즉 기후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른, 처음 집회에 참여하는, 대중들의 참여를 모아냈기에 유의미하게 평가된다. 즉 당사자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집회였지만, 기후위기가 몇몇으로 대표되는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회공동체 내 청년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기후위기 당사자성을 가진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중차대한 과제에 있어 공감대를 넓히고 개인 실천을 넘어 운동의 영역으로 가기 위해 청년 뿐 아니라 중년, 중산층(이상), 높은 직위의, 교회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까. 다른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같은 위기의식으로 기후정의를 이해하고, 공동으로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같은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작년 봄 기후위기와 기독교를 엮은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선 자리에, 환경운동을 하는 한 목사님의 발제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버리고 가난을 선택하고, 우리부터 소박한 삶을 추구하자.'는 결론에 '우리'란 누구인지, '자발적 선택이 가능한 가난'에 대한 대상화, 그리고 '소박한 삶'의 미화에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교회공동체 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감각이나 해결 방식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음에 놀라 토론자로 나선 자리에서 쏟아내듯 여러 제안들을 했다. "첫째, 교회 내 개인에게 실천을 독려하고, 교회를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다. 기후 이야기를 하며 개인 실천을 강조해온 것들이, 오히려 에코백이나 텀블러 환경주의로 미화되어 중산층 중심 개인의 더 많은 소비를 부추기고 다시 자본만 강조하는 '착한 시민 되기'로서 작동해 왔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조직해서 정부에 직접행동을 통해 요구해야 할 때다. 둘째, 기후위기로 가장 피해 입는 소수자, 노동자, 여성, 청소년, 노인 등에 대한 이해 없이 조직화와 운동은 어렵다. 신학적 의미와 기후운동이 충분히 연결 지점 있으나, 공동의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여전히 개인으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낮은 인식과 이해, 그리고 공동체로서 개인 구원과 교회 성장에 목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구조 안에 전문가, 중년 남성, 목사들의 목소리가 제일 크다는 것이다. 획일화된 운동 주체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 기후운동은 전혀 새로운 판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판은 청소년, 여성, 노동자, 성소수자, 비인간 동물의 목소리로 채워져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말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많이 만드시라. 더 많은 여성, 청소년, 노동자, 농부가 참여하도록 제안해 달라."고 말이다.

결론은, 교회공동체 안에 갇히기보다 사람들을 조직하고, 지역현장과 당사자를 고려한 사회운동으로의 확장에 대해 말했지만, 일 년이 더 지난 오늘은 기후위기의 심각성 알리기, 당사자의 참여, 조직화의 중요성에 더해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한다.

2.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정치해야 한다.

얼마 전 어느 대형 교회에서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이 전도하자'는 뉘앙스의 문구를 본 적이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전에 한명이라도 더 전도를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 종말에 대비해서 한명이라도 더 전도할 것이 아니라,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해 한명이라도 더 부정의하고 불평등한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뭉치자고 전도를 해야 할 때다. 우리는 그 '전도'를 조직이나 운동을 넘어 '정치'라고 불러야 한다.

기후정의에 대한 해결책은 사회적이고 또 정치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발제문을 통해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조직활동가로 정당정치를 시작하게 된 경험에 비추어, 기후위기 시대에 교회와 사회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청년, 그리고 그 과정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기성세대가 해야 할 일은, 청년을 '조직'하고, 청년들이 '정치'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당사자로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드러낼 장을 만들고, 교육하고, 조직하고, 시위를 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다. 많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

한 사회적 운동이 정치 참여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중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우리만'의 운동으로 축소되거나, 기후위기 대응에 더딜 수밖에 없다.

지금은 청년 당사자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때다. 기업과 자본주의를 대변하는 거대 양당에 속할 것이 아니라, 기성정치의 균열을 내기 위해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으로 참여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선거 때만이 아닌,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을 정당 안에서 하는 것이 정치다.

시민사회운동단체는 정당을 피하고, 정당은 선거 때만 모이다 흩어지고, 교회는 교회끼리만 뭉친다. 아직도 교회에서는 정치적 의견을 내는 것을 터부시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으로 다뤄진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 내 기성정당들이 엉망으로 쌓아온 모습이 빚어낸 정치혐오 문화다.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대상화하며 폭우에 반지하를 모두 없애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이나, 공공 임대주택 예산을 깎으면서 청년을 위한 주거정책을 말하는 대통령이나, 청년들의 삶을 고려하지도,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정책과 선언들만 쏟아내고 있는 것이 정치의 모든 면은 아니다. 사회 변화를 위해서 정치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변화의 과정에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발제자가 말하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참여' 그리고 '기후정치의 중심에 서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닐테다.

그러니 오히려 정당에 가입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정치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이 직접 정치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결국은 정치가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3. 나가며

청년 정체성에서 약간 벗어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대안들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다.

첫째, 기후 관련 책모임을 많이 하는 것이다. 기후정의운동에 다양한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고, 교회공동체 안에서 청년 당사자로서 이해의 차이를 좁혀가는 과정에 나섰으면 한다. 둘째, 예배 후에는 거리에서 집회를 열자. 현재 기후위기기독인연대 오픈 마이크가 진행 중인데, 시민들과 만남의 접점을 확장하면서 기후위기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자. 셋째, 가능한 일인가 싶겠지만 여러 종교를 대통합해서라도 대규모의 기후종교집회를 했으면 한다. 당사자로서 청년, 청소년, 어린이를 조직하는 것 뿐 아니라 기성세대를 압력해서 함께 나오자. 넷째, 집회를 다녀온 후에는 경험을 나누고 의제를 확산하는 기후토론회를 열자. 또 대학 종교동아리를 순회하며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정당에 가입하자. 기후위기 당사자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더 많은 청년들이 내 정당을 찾고, 직접 정치하는 것을 제안한다.

924 기후정의행진의 마지막 구호는 '우리가 길이고 우리가 대안이다'였다. 기후위기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청년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한국의 기후운동사와 기후정치사에 새 길을 터감으로 새로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